

확장적 재정정책과 한국경제성장

한국경제론

2018. 4. 13

백찬규(20130602), 김소정(20150159)

노동균, 위레이

목 차

I.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방향

II. 본론

1. 확장적 재정정책과 성장 간 관계

1.1) 변수 및 모델 설명

1.2) 결과 해석

2. 과거 정부의 재정 지출 기조 및 시사점

재정지출과 국가채무 추이

III. 결론

연구의 요약 및 제언

IV. 참고자료

I. 서론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사람 중심 경제'라는 패러다임 하에 확장적 거시 경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혀왔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규모 재정 자금을 편성하겠다고며, 재정 지출 증가율을 7%대로 확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의 네 가지 큰 틀 중 특히 '소득 주도 성장'에서 가계 소득을 경제 성장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같이, 문 정부는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거시적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기대하는 듯하다. [1][2]

이와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 우선 확장적 재정정책이 과연 성장을 가져오는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이는, 재정지출에 의해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케인즈 가설과, 오히려 재정지출 확대는 성장의 결과일 뿐이라는 와그너 법칙이 그것이다. [3] 와그너 법칙이 사실이라면,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는 무의미한 노력이 될 것이다. 또한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막대한 지출을 요구하며 이는 국가부채의 장기적인 증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예측 역시 존재한다. [4] 이러한 예측대로 재정지출의 효과가 일시적인 경기 부양에 그치고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약화시킨다면,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성장이 한국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 시계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다음 과거 정부의 재정지출 기조를 분석하여 최근 확장적 재정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논하였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가채무 추이와 재정수지를 관망하며 문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II. 본론

1. 확장적 재정정책과 성장 간 관계

1.1) 변수 및 모델 설명

본 연구에서는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변수로 국민총소득(GNI)을 사용하였다. 통상 국내총생산(GDP)을 경제성장 지표로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국민총소득을 인구 수로 나눈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 데이터(RGNI)를 사용하였다. 이유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고자 하는 경제 성장이 국민의 가계소득 증대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의 소득까지 포함되는 국내총생산보다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만 계산한 국민총소득이 문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 성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판단, 이러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재정 정책을 나타내는 재정지출 변수는 일반 정부의 총지출을 이용하였다. 실질 변수인 RGNI와의 비교를 위해서 GDP디플레이터(2010년 기준)를 이용, 상대가격 효과를 제거하였으며, 총인구로 나누어 1인당 변수로 바꾸어 사용하였다(RGGE).

두 변수를 가지고 재정 지출과 경제 성장의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그레인저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을 이용하였다. 그레인저 검정은 정상성을 띄는 두 시계열 변수의 과거 데이터를 결합하여 선형 예측을 시행한다. 두 변수를 이용한 예측의 오류가 한 변수만을 이용한 예

측의 오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으면 두 변수 사이에 그레인저 인과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시계열 데이터는 1970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간 지표를 사용하였다. 한국 경제 발전사를 정책적으로 되돌아보았을 때,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통해 세계 무역시장에 한국을 등장시킨 것이 토대가 되어 경제 성장이 가속화 되었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수출 10억 달러 달성 등의 경제 고속성장 지표가 존재하는 1970년대부터 분석함이 한국의 경제 성장을 분석함에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1.2) 결과 해석

우선 두 시계열 변수의 정상성 확인을 위해 단위근 검정(Augmented Dickey-Fuller Test)을 시행하였고 비정상성을 확인하여 두 변수를 1차 차분하였다. 차분한 변수의 ADF Test 결과는 RGNI의 p-value가 0.03245, RGGE의 p-value가 0.0624로 모두 0.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기에 정상시계열임을 확인하였다. 이후 R의 'lmtest'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그레인저 인과관계를 검정하였다. 그 결과 RGNI가 RGGE에 미치는 영향은 시차가 1,2,5 일 때 모두 0.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차 2일 때 p-value 0.03338으로 유의성이 가장 높았다. 반면 RGGE가 RGNI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어떤 시차를 두어도 모두 p-value값이 0.1을 초과하였다.

이는 한국경제의 시계열 데이터가 와그너 법칙을 지지함을 뜻한다. 즉, 한국경제의성장이 재정지출확대의 선행 요인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현재 확장적 재정정책의 의도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이다. 문 정부는 재정 지출 확장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 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의도로 경제 정책안을 내놓았지만 70년 이후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이는 선후관계가 뒤바뀐 정책으로 보인다. 때문에 단순히 재정지출의 확대만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단순한 주장이다. 재정지출 확대에는 국가부채의 증대 등 많은 부담이 필연적이기에 정책 시행 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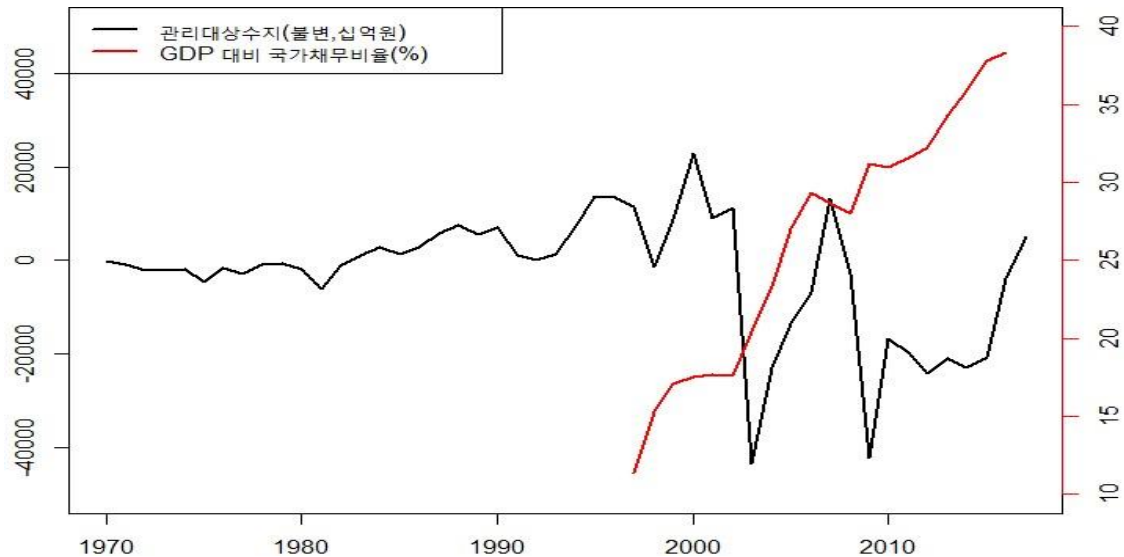
2. 과거 정부의 재정지출 기초 및 시사점 / 재정지출과 국가채무추이

참여정부 이후 각 대통령 집권기간 별로 재정지출 기초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확장적, 후기에는 긴축적으로 운용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집권 초기에는 후보 시절 공약 실행과 경기 부양 등을 위해서 지출이 늘지만, 후기에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않을 수 없기에 긴축적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5] 이는 현재 일자리 정책 등을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정책을 펴고 있는 문 정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국가재정의 여력이 충분치 않으면 집권 후기에 긴축 재정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기에 조삼모사에 불과한 격이다.

그래프1을 보면 이미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가채무비율이 최근 지속적으로 악화하고있다. 이는 90년대 후반 이후 관리대상수지 적자폭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 관리대상수지는 일반정부 총수지에서 사회보장기금 총수지를 뺀 값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기금의 변동과는 별개로 정부의 재정상황을 가늠하기 위해 만든 지표이다.

그래프의 변동 양상과 같이 국가채무비율의 증대는 관리대상수지의 적자에 부분적으로 기인

한다. 재정지출이 늘면 자원 조달을 위한 채무 역시 자연스레 증가하기 때문이다. 최근 지속적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기에 재정지출 확대 문제에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까닭이다. 물론 IMF 등이 추계한 한국경제의 재정여력이 아직 양호한 수준이라는 시각도 있다. [6] 그러나 심화된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국가부채 문제는 조속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프1. 시계열 분석 결과 관리대상수지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그래프]

III. 결론

본 연구는 1970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과 1인당 정부지출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가계 소득 증가를 경제 성장의 원천으로 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제 성장 변수도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으로 설정하였다. 그레인저 인과 관계 검정을 실행한 결과, 경제 성장이 재정 지출 확대에 앞선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이다. 정부 총지출의 증가가 1인당 국민 총소득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기조를 1970년대부터의 한국 경제 시계열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더욱 면밀히 살펴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확장과 긴축을 반복하였던 과거 재정지출 기조와 최근 급증한 국가채무의 문제는 재정 지출 확대에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함을 함의한다. 집권 후반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로 다시 긴축적 재정정책을 펼칠 것이 과거 한국 경제 데이터로부터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경제 성장은 단순히 확장적 재정 정책의 실시만으로는 장담할 수 없으며, 재정과 관련된 여러 변수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 정책 추진 전, 정책의 비용대비 경제 성장에 가져올 효용을 엄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IV. 참고자료

[1] 연합뉴스, "[새 정부 정책] ② 확장적 재정정책 전망...소득 늘려 가계빚 해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0/0200000000AKR20170510130000002.HTML>.

[2] 기획 재정부, 2017,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3] 문영일, 원일, 2013, "경제성장과 재정지출간의 인과관계 분석: 경제개발지출 및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4] 한국일보, "문 정부 핵심 재정정책으로 2060년 나랏빚 3400조 늘 것",

<http://hankookilbo.com/v/237f2a8ad62a46fa804beedd5637fd73>.

[5] 현대경제연구원, 2017, "과거 정부의 재정정책 특징과 시사점-집권 초반에는 확장적, 후반기 긴축적", 경제주평.

[6] 이태석, 허진욱, "재정여력에 대한 평가와 국가부채 관리노력 점검".

[7] 시계열 분석 결과

```
> grangertest(RGGEperC1~RGNIperC1,order= 2)
Granger causality test

Model 1: RGGEperC1 ~ Lags(RGGEperC1, 1:2) + Lags(RGNIperC1, 1:2)
Model 2: RGGEperC1 ~ Lags(RGGEperC1, 1:2)
      Res.Df Df      F    Pr(>F)
1         40
2         42 -2  3.7057 0.03338 *
---
Signif. codes:
0 '***' 0.001 '**' 0.01 '*' 0.05 '.' 0.1 ' ' 1
> grangertest(RGNIperC1~RGGEperC1,order = 2)
Granger causality test

Model 1: RGNIperC1 ~ Lags(RGNIperC1, 1:2) + Lags(RGGEperC1, 1:2)
Model 2: RGNIperC1 ~ Lags(RGNIperC1, 1:2)
      Res.Df Df      F    Pr(>F)
1         40
2         42 -2  1.4424 0.2484
```

[8] 데이터 출처

한국은행 데이터 활용하여 계산, 그 외 통계청과 기획재정부

관리대상수지 = (일반정부 총수지 - 사회보장기금 총수지)

불변가격 데이터는 GDP디플레이터 이용해 상대가격 효과 제거

	총인구 #통계청	관리대상 수지(TB)	1인당 일반정부 총지출(RGGE) (불변)	관리대상수 지(RTB) (불변)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 (RGNI)	gdp대비 국가 채무비율 (NDR) #기획재정부
단위	천명	십억원	만원	십억원	만원	%
1970	32241	-1.6	41.88078	-38.7315	247	
1971	32883	-40.1	47.25429	-872.688	264	
1972	33505	-114.3	47.5521	-2148.5	276	
1973	34103	-134.9	50.13796	-2249.46	310	
1974	34692	-150.7	55.69537	-1924.65	323	
1975	35281	-440	70.67223	-4546.39	331	
1976	35849	-179.4	73.6542	-1528.24	383	
1977	36412	-387.9	83.49845	-2887.45	429	
1978	36969	-127.5	84.79565	-778.103	473	
1979	37534	-117	93.91272	-602.41	503	
1980	38124	-484.1	98.40929	-1999.92	467	
1981	38723	-1697.3	115.6491	-6014.1	484	
1982	39326	-319	114.7476	-1061.6	523	
1983	39910	381.9	122.8984	1212.15	587	
1984	40406	899.7	123.9524	2734.734	640	
1985	40806	455.4	134.5366	1331.073	677	
1986	41214	1000.5	140.7624	2786.287	763	
1987	41622	2173.6	148.829	5767.812	866	
1988	42031	3068.7	166.5756	7602.755	972	
1989	42449	2375.3	187.1752	5549.507	1047	
1990	42869	3303.9	209.4514	7010.482	1134	
1991	43296	536.9	238.1849	1040.544	1240	
1992	43748	67.2	259.998	120.8764	1303	
1993	44195	728.3	271.2311	1233.591	1382	
1994	44642	4668.1	277.3515	7314.134	1495	
1995	45093	9356.8	306.1887	13709.2	1610	
1996	45525	9616.8	334.116	13514.9	1695	
1997	45954	8555.8	362.5572	11554.24	1745	11.4
1998	46287	-1090.4	385.6433	-1407.55	1591	15.3
1999	46617	6681.7	415.0621	8728.543	1745	17.1
2000	47008	17665.9	431.5201	22829.47	1838	17.5
2001	47370	7226.8	478.334	9010.186	1892	17.7

2002	47645	9220.3	504.3869	11154.35	2039	17.6
2003	47892	-37109.5	645.2515	-43419.2	2078	20.4
2004	48083	-20155.2	613.28	-22899	2152	23.3
2005	48185	-12072.7	632.9017	-13576.1	2188	27
2006	48438	-5993.2	676.274	-6748.95	2260	29.3
2007	48684	12057.5	699.3259	13260.05	2371	28.7
2008	49055	-2767.5	769.7233	-2956.13	2355	28
2009	49308	-41003.9	840.574	-42300.4	2401	31.2
2010	49554	-16776.7	791.5892	-16776.7	2556	31
2011	49937	-20115.1	849.7698	-19801.3	2578	31.6
2012	50200	-24857.9	874.8908	-24217.4	2634	32.2
2013	50429	-21603.3	869.6386	-20868.5	2720	34.3
2014	50747	-23879.5	899.2614	-22929.7	2794	35.9
2015	51015	-22042	928.559	-20670.3	2960	37.8
2016	51246	-4315.5	950.55	-3968.46	3064	38.3
2017	51446	5665.7	981.3071	5094.687	3065	